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게 마련이다. 이번에는 IT와 유비쿼터스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첨단 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다.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U-City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비전과 청사진을 살펴보았다.

글 김병수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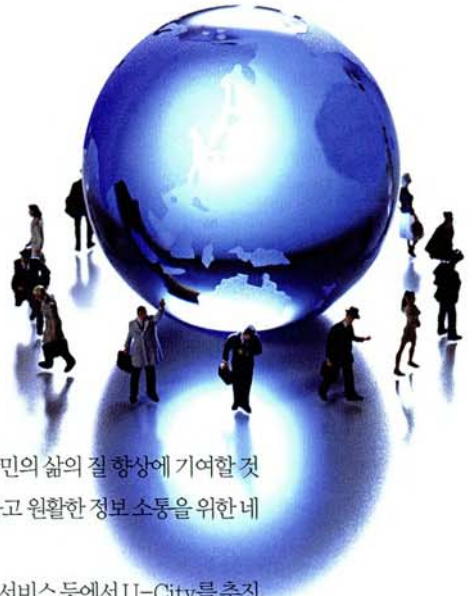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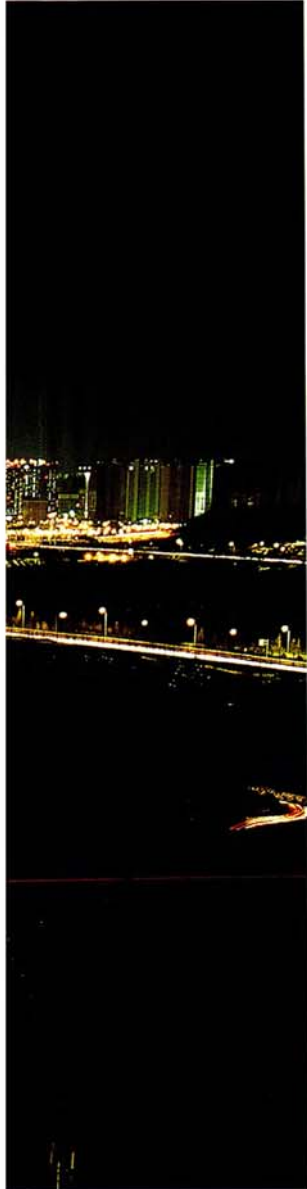


미래형 첨단 도시, U-City 추진 전략
IT·유비쿼터스 기술 접목한
도시 개발 시작된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해 생활의 편의를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대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C 첨단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도시 건설 목적이 과거 행정, 산업, 주거, 군사 등의 기능을 분담하는 형태에서 삶의 질이나 도시의 특화된 경쟁력 향상으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U-City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의 도시 건설 방향은 U-City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산·학·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기술을 도시 공간에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U-City는 국토 균형 발전의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선도하고, 전 국토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균등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서울 상암, 인천 경제자유구역, 제주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에서 U-City를 추진해왔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U-City를 표방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도시 개발자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City를 건설 중이다. 앞으로 건설될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U-City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들의 U-City 추진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선언적 개발 구상에 그쳐 있고, 신도시 개발에서도 도시 간 통합 및 표준화된 모델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U-City의 접근 방식이 정보통신 기술 중심이어서 도시 계획 측면의 공간적 접근이 부족하다. 관련법·제도가 미비하고 관련 부처 간의 역할 정립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제도적인 한계와 이견으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해외에도 선례 없는 U-City 국가 경쟁력 확보케 해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U-City 사업의 성공 전제 조건인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세계 제일의 U-City 실현 및 해외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U-City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U-City 건설을 위해 건교부와 정통부 공동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가칭「U-City 건설지원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정통부는 실무 T/F를 구성했으며 올해에는 두 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U-City 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와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건설교통부는 U-City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건교부의 R&D 중점 프로젝트 사업에 「U-Eco City 건설」을 포함해 연구 개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U-City 건설이 착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U-City는 정보통신 기술의 바탕 위에서 많은 공공 서비스 분야가 도시 공간에 구현되는 만큼 U-City의 정책 입안과 제도 개선, 사업 추진 등에 관련한 부처의 협조 없이는 성공이 보장되기 어렵다. 우리가 추구하는 U-City는 해외에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이견을 협의 조정기구를 통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교부는 정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U-City 건설지원법(가칭)」 제정을 착수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향후 U-City가 건설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대폰 등이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건설되는 U-City 모델이 해외에 수출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확보될 날을 기대해본다. ☺